

윤석열 정부 1년

이제는 경제다

2023. 5. 11. (목) 오후 2시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패널

- | 좌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국회의원
- | 토론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임무송 前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여의도연구원

윤석열 정부 1주년 시리즈 세미나 ④

“이제는 경제다”

□ 개요

- 주제: [윤석열 정부 1년] “이제는 경제다”
- 일시: 2023년 5월 11일(목) 14:00~15:30
- 장소: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주최: (재)여의도연구원
- 참석자
 - 좌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국회의원
 - 토론: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임무송 前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초빙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계획안

시간		일정
14:00 ~ 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14:05 ~ 14:10	5'	○ 내빈 소개 및 인사말씀
14:10 ~ 15:20	70'	○ 토론회 - 지정 토론
15:20 ~ 15:30	10'	○ 종합토론
		○ 폐회

[윤석열 정부 1년] “이제는 경제다”

토론

권 남 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한국경제의 과제와 대응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건국대)

I. 한국경제의 진화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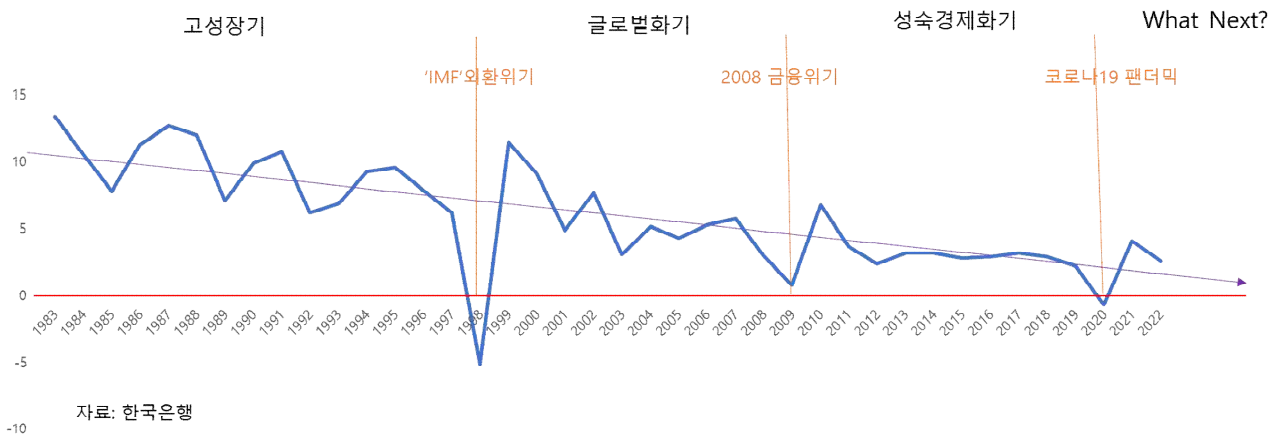
□ 한국경제는 성숙기를 지나 초저성장기로 접어들 위기에 처해 있음

○ 실질GDP 성장률은 2050년에 0.5%, 생산성 부진시 0%로 전망(KDI)

- 선진국으로 접어들며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 삶의 질 유지가 불가능함

* 성숙경제(mature economy): 인구가 안정되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더 이상 견고하지 않은 국가의 경제(Barron's Financial Dictionary)

실질GDP 성장률 추이(%)



○ 경제가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당면과제도 변화하고 있으나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더 힘든 과제들이 누적된 상태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복지확충, 불평등과 노인빈곤 문제해결, 내수와 서비스 산업발전, 환경오염 대응 등의 과제가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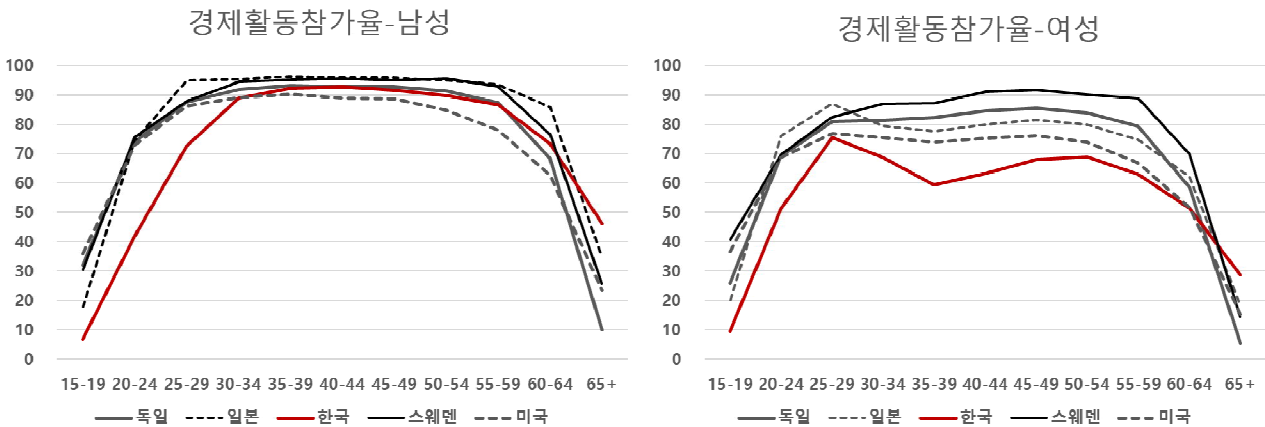
- 코로나19를 거치며 초저성장 극복, 저출산·고령화 문제, 기후위기 대응, 미중대립과 신보호주의 대응 등의 문제가 추가로 부상함

- 특히, 지난 10여 년은 성숙경제화에 따른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기였으나 방치됨
 - 현재 겪고 있는 각종문제들에 대한 경고음은 오래전부터 나왔음
 - 인구감소는 80년대 말부터 예측되었고,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중단
 - 국가 부채비율 악화, 청년실업 문제, 국제적 기후대응 압박 등은 2010년대 초부터 이미 나타난 현상
 - 여기에 前정부는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문제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킴
 - 소득주도 성장론, 징벌적 부동산 규제, 재정지출 급증, 문케어, 연금개혁 거부, 전기·가스요금 인상거부, 비현실적 NDC목표 상향과 탈원전 등
- 윤석열 정부는 방향성의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꾸준한 추진이 필요
 - 前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 정상적 경로로 선회한 것은 긍정적
 - 다만, 포퓰리즘적 접근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 개혁 고통분담은 결국 국민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임
 - 그러다 보니 일부 개혁은 이미 난관을 겪거나 후퇴 의심을 받고 있으며, 충선을 앞두고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단순히 前정권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 경제전략 수립과 체질전환 및 구조개혁에 대한 비전의 제시가 필요함
 - 중장기 비전의 부재는 (정당한 비판이든 아니든) 정권초부터 현정부에 대한 대표적 비판요소로 작용해 왔음
 - 성숙경제화 이후 축적된 한국경제의 여러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숙경제에 맞는 개혁의 중심을 삶의 질, 기회, 지속가능성에 둘 것을 제안함
 - 구성원 각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현재보다 높거나 최소한 유지될 수 있어야 함
 - 개인에게 보다 자유로운 성취의 기회(Opportunity)를 부여하는 방향이어야 함
 -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함 (Sustainability)

II.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응대책 수립

□ '적응정책'에 대한 방향성 부재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최저의 출산율('22년 기준 0.78)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매우 높아졌으나 체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함
 - 수백조 원의 저출산 예산 집행실적은 '무능 + 대책 없음'을 부각하는 역할, 추가로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제안들의 양산이 우려됨
- 출산율의 제고는 장기정책이며, 당장에 긴급한 것은 적응대책
 - 지금 당장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더라도 그 효과는 최소 20년 후에 나타나며, 예산투입으로 출산율 제고가 얼마나 가능할지도 미지수
 - 적응대책으로서 자본 및 기술투자 촉진(노동 생산성 제고), 여성인력 활용 확대, 이민정책 검토, 청년의 조기 사회진출 촉진, 정년 연장 검토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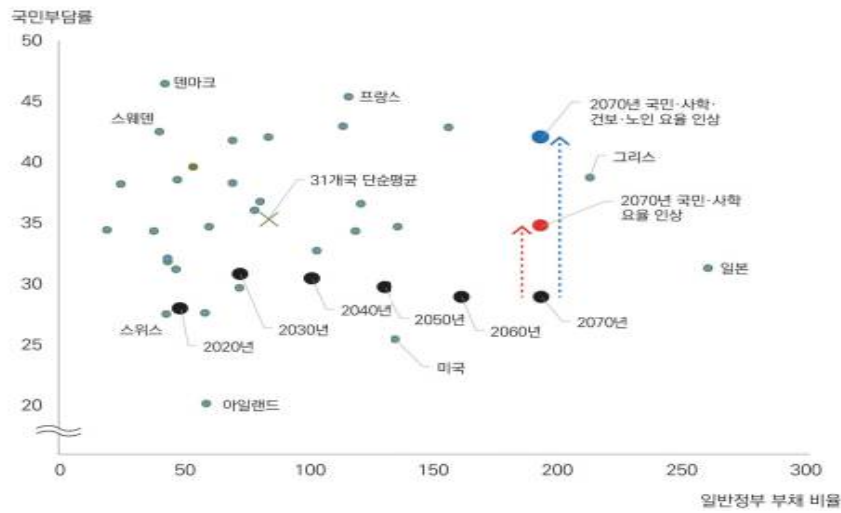


□ 재정건전성,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에 대한 방향성 정립 필요

- 세 가지 모두 국민들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개혁이지만 이대로 두면 파국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미 확실함
 - 현 복지제도 하에서도 2070년에는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192.6%로 상승, 연금과 건강보험 적자를 재정으로 해소하게 되면 국민부담률은 추가로 28.6%에서 42.0%까지 상승
 - 국민연금 수지균형을 위해서는 부담률을 현재 9%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055년 이후 부담률이 약 30%로 증가

[OECD 주요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일반정부 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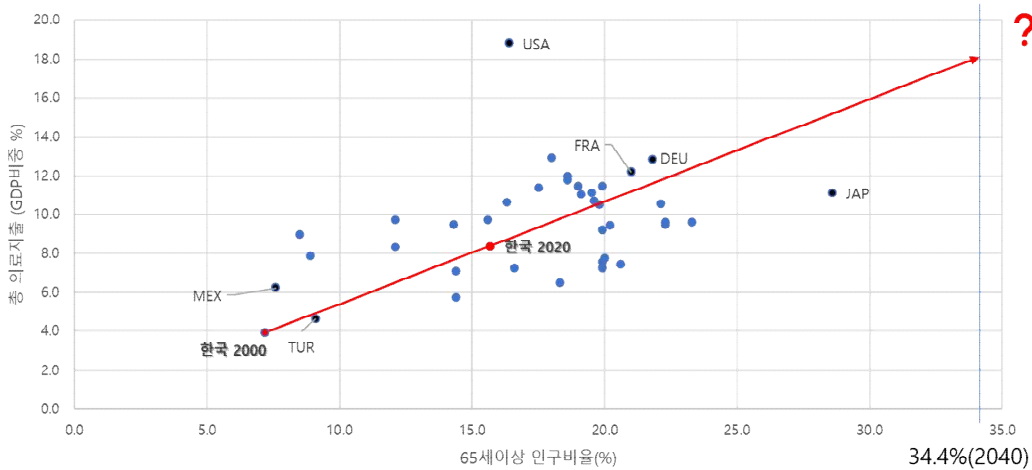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예산정책처(2022)

- 가계 의료비 부담수준(GDP대비 3.1%)은 이미 주요 선진국보다 높고,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2040년에는 GDP대비 의료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도 될 수 있음

인구고령화와 총 의료지출(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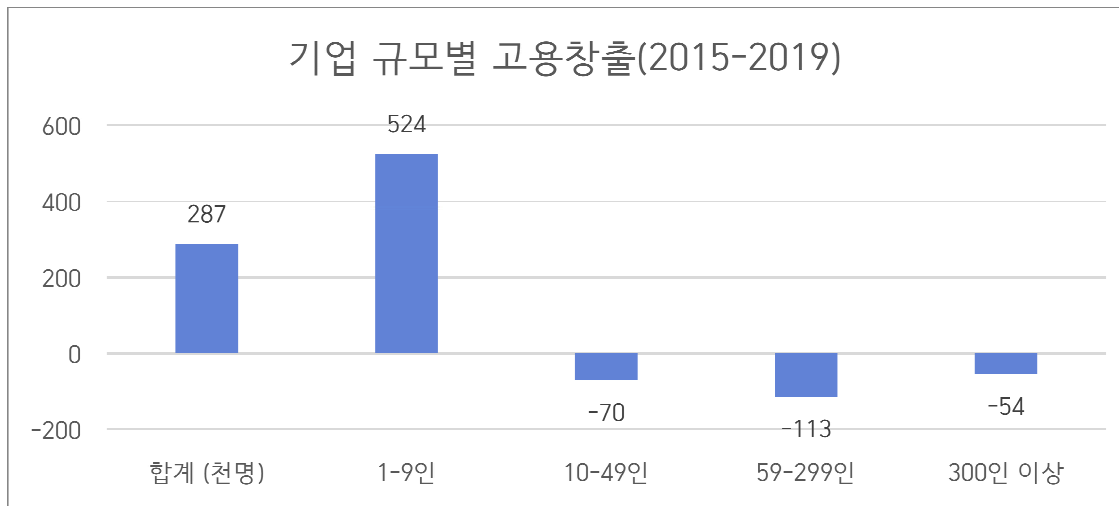
자료: 전병목(2023), 원 자료 OECD.stat

- o 당장에 고통스러운 개혁조치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히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솔선수범하여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Ⅲ. 저성장과 청년 기회창출을 위한 구조개혁

□ 서비스 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

- 국내 민간 일자리의 77%가 서비스업 종사자이며, 사실상 모든 신규 일자리가 서비스업에서 창출 (제조업은 조금씩 감소 중)
 - 다만, 신규 일자리 창출은 거의 대부분 생산성 낮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에서 이루어져 질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자료: 전현배, 신동한(2022)

- 한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수준은 40%에 불과하며, OECD(2022)에 따르면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잠재성장률 0.9%p, 1인당 GDP 60% 상승 가능
- 서비스업 일자리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진입촉진과 규제혁신 필요
 -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신규진입과 퇴출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됨
 - 특히 고령화로 인해 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성장과 고품질화 중요

□ 청년에 대한 기회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노동 및 교육개혁 접근 필요

- 한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 연공서열형 직급체계가 유지됨
 - 첫 직장이 생애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학입시나 사교육 등에 대한 열기가 높은 것도 좋은 첫직장에 집중되는 노력의 결과임
 - 청년에게 넓은 기회와 재도전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동시장

의 이중구조 해소, 유연성 제고 등의 노동개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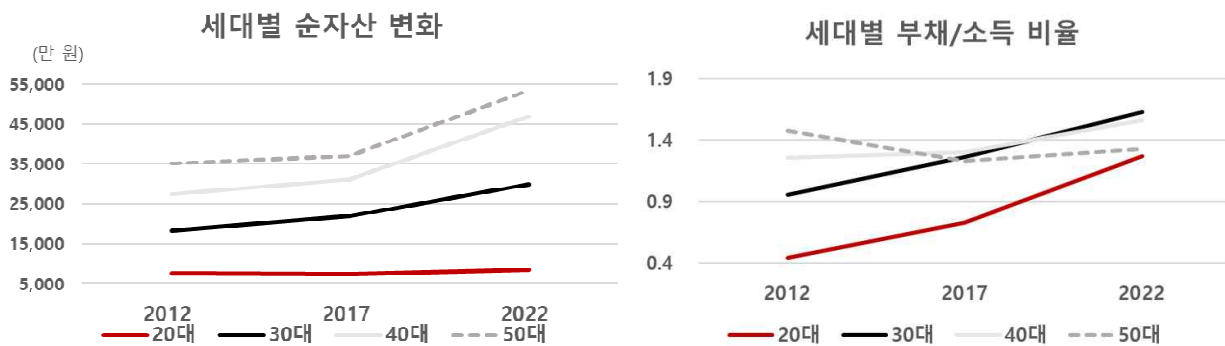
○ 보육서비스 확대, 초중고 교육의 책임성 강화, 직업훈련 투자 강화 등도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 영유아기의 양육, 보육환경이 성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많음
- 초중고 교육에 대한 공교육 책무성이 높았던 시기에 기초학력 높아짐
-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수준 악화 해소 차원에서도 필요

□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및 부채관리 지원 필요

○ 부동산 가격급등 등으로 인해 40~50대의 순자산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대는 정체상태

- 반면,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0대가 특히 빠르게 증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22)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필요

- 출생시부터 목돈마련 계획 지원, 청년도약계좌 강화, 장기 모기지 등
- 부채상환 부담을 줄이고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생애설계 필요

IV.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

□ 스마트한 '신질서' 산업정책 수립의 필요성

○ IRA, 반도체법 등 미국의 대중 경제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EU도 이에 동참하는 등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가 가시화됨

- 2020년 이후 미국이 추진한 대규모 산업정책 이니셔티브만도 수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내용은 국내기업 및 특정산업 진흥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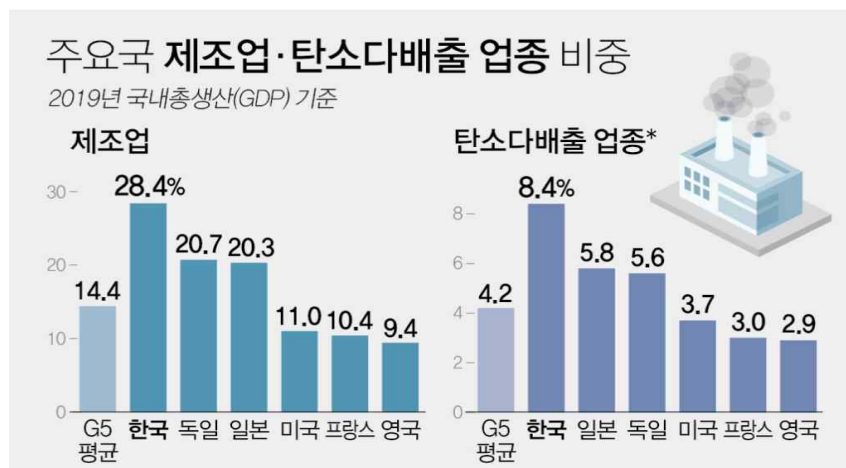
○ 달라진 신질서 구도에 대응하여 스마트한 산업정책 추진이 필요

- 우리나라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산업정책적 수단을 이미 활용하고 있으나 백화점식이고, 분야별로 나눠주기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
- 정부개입의 총량은 오히려 줄이는 것이 맞으며, 동시에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글로벌 신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함

□ 현실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

○ 문재인 정부가 통과시킨 2050 NDC 탄소중립법(2030까지 40% 감축, 2050까지 완전감축)은 비현실적 희망사항에 가까움

- 구체적 이행방안 부재, 상용화 안된 신기술 의존, 전환비용 계산 없음
-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에 불리한 자연환경(4계절 변동성, 전력망 고립)과 산업구조(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 제조업 중심)를 가짐



자료: 연합뉴스(2021.12.9.)

- 전기화 과정에서 LNG 의존도가 높아지고, 송배전망 투자도 필요하나 이를 감당할 한전, 가스공사 등의 적자와 부채는 크게 누적
-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무리였음을 인정하면서, 대전환 전략으로 에너지 소비구조 이행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회모색 필요
 -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정책적 통합 및 산업적 시각 확대 필요
 - 전력산업 구조개편, 지역 산업구조 전환, 친환경 서비스 시장창출 등

[윤석열 정부 1년] “이제는 경제다”

토 론

임 무 송

[前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임무송

노동개혁, 의의와 성과

▪ 진행 경과

- 대선 공약(minimax) → 국정과제 → 업무계획 → (연구회) → 노동개혁

▪ 추진 성과

- 긍정 평가: 노동개혁, 국가적 과제로 설정,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
 - 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의 선봉역할
- 불법/부당행위 원칙 대응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건설노조 불법·비리 척결, 회계 투명성 확보, 보조금 개혁 등
- 지지 여론(조건부)
 - 개혁 필요성과 기본 방향 지지
 - 구체적인 제도개혁에 대해선 유보적

문제점과 원인은 무엇인가?

▪ 현실 진단: 지체와 동요

- 동력 약화: 방향 실종 우려
 - 예) 근로시간: 유연화 vs. '69시간' 논란, 공짜 야근 ... → '일하는 방식 개혁' 논의 실종
- 저항 강화: 근로시간 개편 저지, 반발 조직화
 - 최저임금, 건설현장, 7월 총파업, 정기국회(국정감사), 총선 등

▪ 원인 진단: CCPA

- 여건: 위기감/절박함 부재, 분열된 사회와 진영 프레임, 여소야대와 대립 정치
- 내용: 비전/목표 불확실, 미시적·지엽적 이슈 ... 가치, 의미, 효과 보이지 않음
- 과정: 전략/로드맵(?), 폐쇄적/권위적 이미지, 공론 미흡
- 주체: 팀플레이 부족, 메시지 혼선
- ✓ 법제 중심 접근, 패배의식, 안일함

노동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3

회고와 전망

▪ 역대정부 노동(개혁)정책

- 김영삼정부: 세계화와 '신노사관계 구상',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안기부법 단독 처리, 총파업, 노동법 재개정, IMF 외환위기
- 김대중정부: 'IMF 외환위기 극복 사회협약', 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강화
- 노무현정부: 마이너스 고용과 '일자리협약', 화물연대 집단행동, 고용서비스 혁신, 비정규 대책
- 이명박정부: 노사정위 합의, 복수노조·전임자 규정 시행
- 박근혜정부: 공공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 미합의사항 입법 추진, 한국노총 합의 파기, 양 노총 연대투쟁 등
- 문재인정부: '친노동정책'(주52시간,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ILO 핵심협약 비준 등

▪ 여건 전망

- 경제 악화(고용불안), 기후위기, 디지털 변혁, 인구 구조 변화; 진보/보수 세력 균형
- 총선 국면, 노동계 대정부 투쟁

노동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4

무엇을 할 것인가?

▪ 노동개혁의 이념과 비전 제시

- **Why?** 노동개혁=노동체제 재구성; 고용복지(workfare), 여야/노사 공동의 시대적 과제
- **What?** Two track: ① **전문가 TF:** 비전/전략 → 정책/공약; ② **사회적 대화**
 - 가치 'Agenda 2030' 수립: 자유, 민주, 공정, 연대 등의 이념과 가치를 정책으로 연결,
 - 중점 정책과제(예): 일하는 방식의 혁신, 보상체계 대전환, 노조 민주화, 노사관계 합리화,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 창달, 단절 없는 노동이동, 포용적 노동 참여 등

▪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

- **국민공감/지지기반 확장:** (예) 공론 → 미래 구상 발표 → 가치 '미래노사관계개혁위원회'
 - 여소야대: 법 개정 한계 vs. 여대야소: 정부여당안 일방 처리 가능할까?
 - 여론 전환: 중도/합리적 개혁 세력, 전문가그룹, 4050세대 ... 연구기관
- **팀플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실(특보/자문위)+여당(특위/여연)+정부(총리/장관/경사노위)

어떻게 해야 하나?

▪ 단계적 접근과 전략적 역할 분담

- **총선 전:** 현장 바로잡기, 개혁과제/대안 도출 → **총선 후:** 조직/입법 개혁
- **역할 분담:** 대통령(실), 당, 정부(총리, 장관), 대화 기구(예: 미래위), 국책연구기관

▪ 개혁 과제 도출(현장 목소리, 실태 조사) ⇒ 법치 정립, 제도 개혁

- 노사 불문, 균형과 공정 원칙 일관성 유지, 노동 참여와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회계 투명성, 공정채용 →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 생산성; 공공부문 방만경영
- 합리적 개혁세력 동참 여건 조성, 정부위원회 등 특정 노사 과잉대표성 문제 시정

▪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경영자의 솔선수범

- 노동개혁(유연화+시간단축, 임금개편, 중대재해 예방 등), 고용창출, 고등분담

프로젝트 (예시)

경청과 공감, 연대와 통합의 가치 존중

▪ 청년: 도전과 경험 기회 사회보장제

- 특별고용대책: 청년이 만드는 일거리, 일자리(지역재생, 안전,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 Career Bank: 업종 특화, 실전경험기회 제공, 행정/재정 지원, 커리어 DB
- Quick Start 프로그램: 시설투자+맞춤훈련+채용지원+주거지원 → 일자리 창출
- 병역의무(유급+경력): 군 구조개편+병역의무제도 보완(평등사회복무제 등) 사회적 논의

▪ 여성: 차별과 단절 없는 경제활동 지원

- 의무교육 → 의무보육, 남녀 가사/육아공동책임제
- 노동위원회 성차별 구제 → 한국형 '차별시정위원회' 신설(미국 EEOC), 양성고용평등제

▪ 장년: 60청춘, 65현역 사회

- 연성형 정년연장: 65세까지 계속고용제(연금개혁 연계)
- 고용보험제도 개혁: 연령 제한 폐지, 실업급여 피크제(임금체계 개편 연계)

[윤석열 정부 1년] “이제는 경제다”

토 론

최 승 노

[자유기업원 원장]

[토론문]

이제는 경제다, 기업경제를 살려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1. 경제 현실과 진단

-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80년대 까지 이어진 높은 성장세가 꺾이면서 1990년대 부터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
 -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민주화, 노조의 주장을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경제 활력 저하
 - 경제성장세가 꺾이면 일자리 부족, 사회 문제 악화 등 부작용 심화됨

[그림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경제활력 저하
 - 운동권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친노조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음
 - 법과 제도가 반시장적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쇠퇴
 - 반시장적 규제가 늘어나면서 경제 시스템의 경직화 현상 발생
 - 정치 집단의 특권과 지대추구 활동으로 경제구조 취약성 노출

-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10년간 후퇴 중
-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0점에서 2020년 7.42점으로 하락했으며 순위는 31위에서 43위로 열두 단계 하락
- 정부규모,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4개 분야에서 점수가 2015년 대비 하락

<표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연도	전체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시장 규제		
							금융규제	노동규제	기업규제
1980	5.22(58)	6.42	4.11	5.05	5.49	5.00	6.13	-	-
1990	6.53(31)	7.11	5.83	6.45	7.28	5.96	8.33	3.59	-
2000	6.90(54)	7.20	6.15	7.70	6.84	6.59	8.33	3.76	7.68
2010	7.60(31)	7.28	6.33	9.49	7.63	7.30	9.33	4.68	7.88
2015	7.66(41)	6.93	6.50	9.78	7.69	7.40	9.32	4.74	8.14
2019	7.62(44)	6.43	6.60	9.70	7.99	7.39	9.33	4.77	8.06
2020	7.42(43)	6.34 (100)	6.65 (35)	9.65 (12)	7.16 (66)	7.32 (58)	9.13 (27)	4.77 (151)	8.06 (18)

자료: 자유기업원

- 경제성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 개선이 시급
 - 경제자유지수의 순위는 경제성장률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시장규제를 해소해야 경제자유를 높일 수 있음. 특히 노동규제 개혁은 매우 중요함
-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 요즘처럼 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할 때에는 '투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함.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보호한다며 자본의 진입과 투자를 막아 스스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
 - 기업경영과 투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 고용 증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노동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것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2. 일곱 가지 정책 제안

-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있어야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가능
 -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 보조금 제도의 일몰제 의무화해야
 - 정부의 각종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각 분야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보조금과 지원 기간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지출 총액 3년간 동결해야
 - 지난 5년 간 정부의 과도한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국채의 부담이 커진 상태임
 - 정부 지출을 3년간 동결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화를 이루어야 함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해야
 - 파업시 대체근로를 막아 놓은 규제로 인해 노조의 무분별한 불법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노조의 특권을 줄이고, 노조가 사회적으로 합리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리해고 허용하고, 중대재해법, 52시간제 규제 완화해야
 - 노동 관련 규제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여 왔음
 -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중대재해법과 52시간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함

- 수도권 규제 해소하고, 대기업 규제 풀어야
 -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를 해소하여 장기적 성장 기반을 회복하여야 함
 -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법 등에서 제약해 온 대기업의 투자 및 경영 활동 규제를 풀어 다시 기업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윤석열 정부 1년] “이제는 경제다”

토론

한 상 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여연토론회 토론자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대외분야 평가와 과제

한상춘/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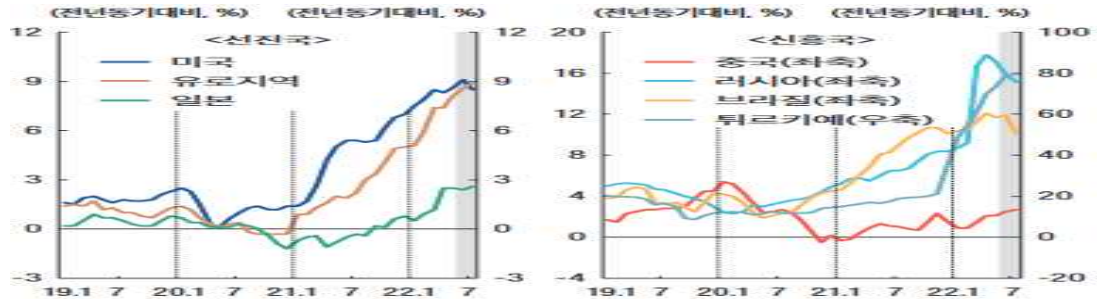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1년 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 비교적 낙관적이었던 세계 경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제봉쇄 조치, 미·중 경제패권 다툼, 신흥국 금융위기, 대영 제국 분열, 코인 사태 등과 같은 대형변수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왔다.

지난 1년 동안 발생했던 대형변수들은 유독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훼손’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종전과 다르다. 세계적인 예측기관들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대형변수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5% 포인트(p) 이상 떨어뜨리고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p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전형적인 스테그플레이션 충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는 올해 세계 경제는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한 금리인상 후유증과 새롭게 발생할 테일 리스크에 의해 좌우되는 추세다. 테일 리스크란 정규분포 상에 양쪽 끝에 해당하는 부문으로 종전의 이론과 관행으로 생각지 못한 리스크를 말한다. 가장 확률이 높은 테일 리스크는 이상기후로 비롯된 디스토피아 문제다.

<그림 1> 세계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자료 : 각국 통계청, 한국은행

국가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조 바이든 정부가 집권 전반기도 채 끝나기 전에 흔들리면서 급기야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게 넘겨줬다. 바이든 정부 집권 후반기 첫해인 올해 미국 경제는 ‘공화당’이라는 최대 제약변수 속에 종전과 다른 새로운 위기 징후군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 이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7대 위기 징후군은 마냐냐 위기(manana crisis), 착한 정책의 역설(angel policy paradox), 삶은 개구리 징후군(boiled fr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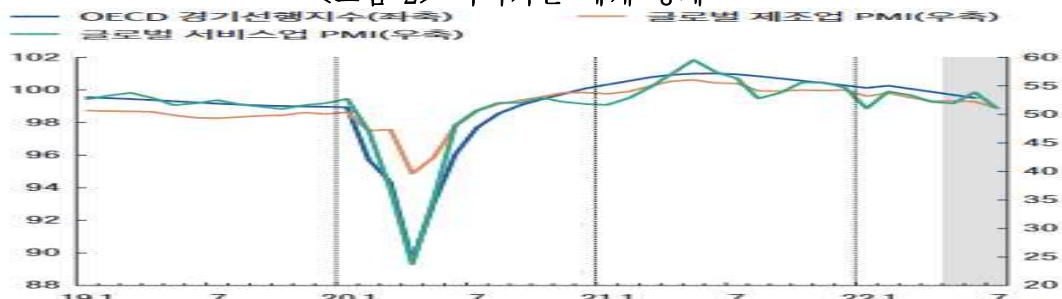
syndrome), 무각통증(disregard), 신 너트 크래커(neo nut cracker),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 핀볼 위기(pinball crisis) 등이다.

7대 신위기 정후군에 빠진 미국 경제의 고민은 2022년 8월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 참가했던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입을 통해 노출됐다. 코로나 이후 통화정책 여건이 뉴 애플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그 고충을 호소했다. 파월의 발언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불균형 이론’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이다.

불균형 이론의 요지는 이렇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균형점에서 이탈했을 때 종전 이론에서는 시장조절기능에 의해 이 점에 수렴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 이론에서는 시장조절기능이 무너져 균형점에 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올해 미국 경제는 의외로 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

지난 3월 Fed가 내놓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0.4%다. Fed가 추정하는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1.75%인 점을 감안하면 오쿤의 법칙(실제 성장률-잠재 성장률) 상 1.35%p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 지난해 3월 이후 매회의 때마다 금리를 한 단계씩 높혀 인상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금리를 내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림 2> 식어가는 세계 경제



자료 : 한국은행, 통화정책신용보고서

중국 경제는 이미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회의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영수’ 지위에 등극했다. 공산당 주도의 왕정 체제에서 영수 체제는 시진핑 독주의 절대군주제에 해당한다. 미국 언론이 영수를 단순히 정상이라는 의미의 ‘summit’보다 위대한 통치자를 뜻하는 ‘great emperor’라고 표기하는 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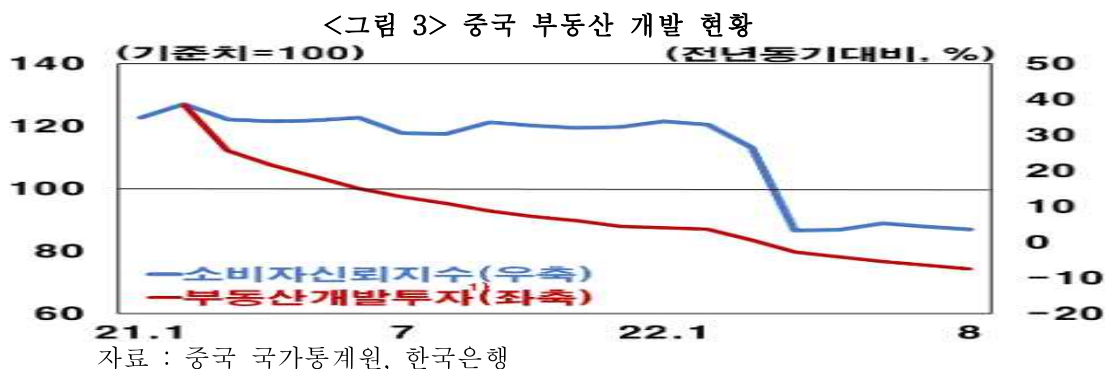
시진핑 독주의 영수 체제에서는 공산당 목표부터 수정됐다. 대내 목표인 샤오강을 ‘공동부유’로, 대외 목표는 일국일제를 조기에 완성하고 중국 중심의 질서인 ‘팍스 시니카’ 야망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종전과 다른 점은 목표시한을 정하지 않아 시진핑의 종신집권 야망이 숨겨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운영계획도 180도로 바뀌었다. 고도성장기의 한 축이었던 ‘시장경제’는 ‘계획경제’로, 또다른 축이었던 ‘개방경제’는 ‘폐쇄경제’로 환원됐다. 경제팀도 러커창·류허·이강 등의 미국 유학파에서 리창·허리평을 쌍두마차로 하는 국내파들로 대거 교체됐다. 한마디로 ‘러커노믹스’에서 ‘시지노믹스’로 대체해 경제 분야까지 장악한다는 의도다.

대외적으로는 보유외화대출을 통한 1단계 일대일로 계획이 자금 수여국의 부채 합정과 디폴트로 부작용이 컸던 만큼 오히려 위안화 결제망 확대와 디지털 위안화의 기축통화 계획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추진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패권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키(key)를 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진핑 영수 체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의 반응은 의외로 빠르다. “일단 중국을 탈출하고 보자”는 차이나 엑소더스(기업)와 차이나런(자금) 현상이 심상치 않다. 1978년 개방을 추진한 이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울 만큼 기업과 자금, 사람을 끌어들이던 중국의 투자 매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특히 예측기관들은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오래갈 것으로 보고 중국의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글로벌화가 급진전되기 시작했던 1990년 이후 성장률 개념의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성장률 목표치인 5.5% 도달은 버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유럽 통합의 맹주 역할을 담당해 왔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떠난 지 햇수로 3년째를 맞는다. 포스트 메르켈 시대 첫해였던 지난해 유럽은 유난히 대형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 등의 총리가 도덕성 문제에 휘말리면서 급기야는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까지 제기됐다.

국가 지도자 문제는 통합력 약화로 직결된다. 영국의 탈퇴로 유럽 통합이 느슨해진 여건에서 유럽 국민들이 악몽에 시달렸던 인플레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유럽재정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국의 탈퇴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는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그리스·스페인)의 탈퇴 운동이 의외로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회원국 내 분리 독립운동도 고개를 들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첫 주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다. 스페인의 카탈루냐와 바스크, 북부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등도 언제든 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회원국 탈퇴가 잇따르고 분리 독립운동마저 일어난다면 유럽 통합은 붕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대 성장동력인 통합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유럽 경제는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하나의 변수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종료되면 성장률이 제고되고 인플레이

가 안정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통합 균열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완화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는 내수부문의 활력을 되찾아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탈피하기란 쉽지 않다. 내수 부진이 고용과 임금 불안정성 증대, 인구 고령화 진전 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여건도 크게 악화돼 1990년대처럼 정부가 민간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체해 추진하는 데도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됐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여건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는 엔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야 가능하다. 2012년 아베 신조가 자민당 총리로 재집권하자마자 엔저를 통해 성장을 지향하는 구로다 하루히코 현 일본은행 총재를 전격적으로 영입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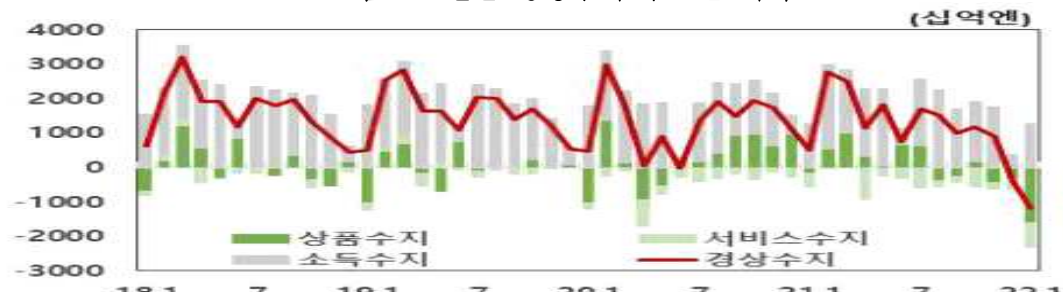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의도대로 효과를 거두기보다 국제금융시장 참가자인 각국 간에 갈등만 조장시켜 왔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아베의 엔저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선진국임에도 인위적인 엔저 유도를 통한 경기부양은 인접국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주는 ‘근린공핍화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엔저로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던 내수업체다. 반겨야 할 수출업체의 불만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업체가 해외로 진출해 엔저가 되더라도 채산성 개선보다 통상환경만 악화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구로다 총재가 퇴임한 이후 일본 경제가 곧바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수부터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엔저 정책은 내수산업을 더 어렵게 한다. 이 상황에서 수출마저 부진하면 일본 경제는 걸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일본이 엔저 정책을 포기하고 인접국에게 공생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내수 확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채무 누적으로 재정지출에 한계가 있다면 일본 국민에게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라는 캐츠 플레이스를 내걸고 ‘부(負)의 저축 준조세’ 등을 통해 내수 진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일본 경제가 살 길이다.

<그림 4> 일본 경상수지 부문별 내역



자료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한국 경제는 어떤가? 올해 첫 경제 실상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주요국가의 1분기 성장률을 보면 중국은 4.5%(전년동기비), 미국은 1.1%(전분기대비 연율)에 이어 한국은 0.3%(전분기대비)로 나왔다. 통계방식을 통일시켜 1분기 성장률을 재산출해 보면 한국이 가장 낮게 나온다.

한국 경제 앞날도 밝지 않다. 지난달에 내놓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성장률을 작년 10월 전망치와 비교해 보면 미국은 1.2%에서 1.6%로, 중국은 4.4%에서 5.2%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한국은 2.0%에서 1.5%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양대 국의 성장률이 올라갔는데 우리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충격적이다.

민간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수출-수입) 등 총수요 항목별 기여도로 1분기 성장률 내역을 뜯어보면 우리 경제가 부진하고 앞날도 불투명하게 보이는 원인이 그대로 드러난다.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은 순수출 기여도가 중국은 물론 미국보다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상징인 수출은 작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여건에서 수출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달러 가치를 알 수 있는 달러인덱스는 작년말에 104에서 지난주말에는 101대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 원·달러 환율은 1263원에서 1341원으로 급등했다. 환율 경쟁력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유리했다는 의미다.

종전과 달리 수출이 부진한 가장 큰 요인은 현 정부 들어 대외경제정책이 너무 빠른 기간 내에 미국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비중이 25%를 차지하는 수출구조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으로 상징되는 직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하더라도 미국으로 급선회한다면 우리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1분기 역성장을 막았던 민간소비 기반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인구절벽 우려 속에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중산층이 무너져 하위층이 두터워지는 계층별 소득구조에서는 고소득층의 소비로 인한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적게 나타난다. 하위층도 고부채와 고금리로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 요인으로 성장이 부진하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그 어느 국가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가장 빨리 금리를 올려왔다. 코로나 이후처럼 공급측 요인이 강하고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은 여건에서 금리인상은 물가를 잡는 효과보다 경기를 침체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

재정정책은 더 큰 문제다. ‘거대 야당’이라는 태생적 입법구조 한계 상 대외여건이 불안할 때 완충 역할을 해야 할 재정지출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케인즈언의 총수요 진작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페이 고(pay go), 간지언 등과 같은 제3의 재정정책 수단을 보완해 놓아야 하나 현 정부는 이런 노력도 부족하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부진하고 앞날이 불투명한 것은 ‘미·중 간 경제패권 다툼’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 대외경제정책이 균형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新)샌드위치 위기 성격이 짙다. 기반이 약한 민간소비로 버티고 있는 내수기반마저 무너지면 총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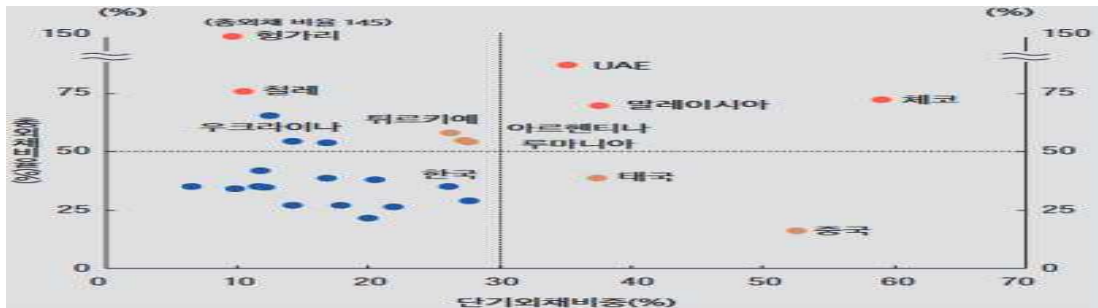
적 위기로 곧바로 추락할 취약성도 갖고 있다.

정책대응 면에서 경제변수는 ‘통제변수’와 ‘행태변수’로 구분된다. 경제패권 다툼 등과 같은 미국과 중국의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형적인 행태변수다. 우리 대외경제정책 상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각국이 양대국으로 편가르기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여건에서는 하루라도 앞당겨야 할 시급한 과제다.

이 점이 전제돼야 우리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국내기업의 투자도 미국, 중국 등 해외국가와 우리 내부 간의 균형을 찾으면서 산업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높은 여건에서는 기업투자에 따라 사람과 자본의 이동까지 수반돼 성장률 제고 효과는 의외로 크게 나타난다.

거시경제목표 우선순위도 수정돼야 한다. 단기적으로 물가와 국가채무 억제보다는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경기부양 주체도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국민이 모두 나서는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이 발휘돼야 한다. 경기회복 과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절대로 안된다.

<그림 5> 한국과 신흥국별 외채 현황



자료 : IMF, 한국은행

[윤석열 정부 1년] 이제는 경제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 박수영

- 지금까지 거시경제 금융 노동, 무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언해 주셨다. 효율적 토론을 위해 1) 제조업 vs 서비스업, 2) 성장 vs 삶의 질, 3)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등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비전과 성장전략 등을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

○ 한상춘

- 제조업 부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갈라파고스 규제가 이를 막고 있다. 확실한 규제 프리존과 과감한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
- 미국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국가조차 이제는 분배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 윤 정부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확실하게 추구하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
-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 큰 정부로 가자는 것은 성장 동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만든 국가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는 셈이다.

○ 권남훈

- 제조업 강국인 우리가 제조업 기반을 지키는 것은 방어 전략으로서 유효하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에 비해 삶의 질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 중에 하나는 서비스 발전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불균형적으로 뒤쳐진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 한상춘

- 제조업과 서비스를 이분법적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미 바이든 정부의 산업 정책, 일본의 21세기 산업 정책, 중국 제조 2025 계획 등 주요국의 산업정책의 세부적 내용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를 구별하지 않는다. 제조업과 융복합하는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고용 창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 최승노

- 외국에 기업을 뺏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해외 공장이 있는 사업자는 대개 국내 공장도 한다. 그러면서 사업구조 다각화, 고도화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소비자와 국민에게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게 되고 국가는 성장한다. 우연한 성장은 없다. 개도국은 높은 성장률, 선진국은 낮은 성장률 이런 공식도 틀리다. 정치 시스템과 리더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놓느냐에 따라 성장의 결과는 달라진다.

○ 한상춘

- 국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으로 평가하는 GDP개념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문제다. 한국의 부가가치 또는 후생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 IRA법 등 자국 이기주의 법을 더 강화하는 이유다. 미국 인프라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으니 미국에서 쓰라는 이야기다. 그게 미국 GDP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리쇼어링을 강화해야 한다.

○ 권남훈

- '성장'이나 '삶의 질 향상'이냐는 대결의 문제는 아니다. 가능한 한 성장을 끌어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보수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을 내세우기에 여건이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장이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담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임무송

- 바람직한 정부를 조직, 공무원, 법령 등이 크거나 숫자로 따질 일은 아니다. 중요한 건 정부의 역할이다. 경제 및 거래 관계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규제나 형벌이 아닌 지원과 지지하는 방식으로 개입한다면 정부의 양적 크기는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Q1 : 은행들이 신생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닌 것 같다. 해결책은?

- 최승노 : 첫째, 은행들이 담보대출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은행 기능이 내부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벤처 투자에 만연한 불법행위들이 철저한 신용 논리로 응징되어야 정상적인 벤처투자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

Q2: 윤정부 1년 공감대 형성 부족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법은?

- 권남훈 : 윤 정부가 지난 1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대전환한 점을 홍보하고 동시에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를 보고 한번 믿어보겠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될 것이다

Q3 벤처기업은 물론 종사자들이 위축되고 있는데 벤처투자 이대로 좋은지?

- 임무송: 불확실하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도전 또는 모험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분위기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장 내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사회 안전망을무작정 확대하는 것에 앞서 현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논의하는 게 실효성이 더 크다